

남북한 평화 개념의 분단사

하영선

I. 머리말

한반도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비로소 고통스러운 일본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냉전체제로 헤쳐 모여 하는 현실의 혼란 속에서 국내 정치사회세력들의 결집에 실패한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불구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서 결국 세계대전 규모의 한국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한국 국제정치가 풀어야 할 최대의 문제로 주어졌으나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풀기의 첫 단계인 평화 개념의 의미조차 남북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근대적 평화 개념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받아들인 후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식민 지주의 평화개념들의 갈등을 거쳤다.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 개념은 침예한 양극 냉전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전혀 다른 평화개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 한반도 평화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 평화 개념의 이질화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하영선 “삼중어려움의 좌절과 극복”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2009)

II. 한국전쟁과 평화

국제체제: 미소냉전의 전개

분단체제: 남북단정의 대결

국내체제: 남북한 근대국가 사회 건설

김일성: 스탈린 1차(1949/3) 2차(1950/4) 마오(1950/5)

이승만: 올리버버서한

김일성의 해방전쟁과 이승만의 무력통일

한국전쟁 후 1954년 6월에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에서 북한의 남일 외상은 제1차 연설에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여섯 항목을 제안했다. 첫째,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하고, 둘째,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군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 측 군대의 수효 10만 명을 넘지 않게 하고. 셋째,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

화 상태로 전환시킬 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정부에 해당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이익과 양립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섯째,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과학·문화교류 및 기타 관계를 설정하며 그를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기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을 단일한 독립적 민주주의적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급속히 해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었다.

북한의 1954년 남북간 평화협정제정은 본질적 변화 없이 1960년대에 반복된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평화협정제정”을 한다.

III. 근대국가건설과 평화

북한: 3 대력명역량강화(1964/2/27 조선노동당 제 4 기 8 차 전원회의, 1965/4/14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

남한: 조국근대화(1966년 박정희 대통령 국회연두교서, 1967년 신년 연두교서 기자회견)

IV. 데탕트와 7.4 공동성명

북한: 1971/4/12 허담의 통일 8 개항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1971/6/10 루마니아 대표단 “박정희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
 1971/8/6 김일성 “남조선혁명의 실현과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공세”
 1972/5/4 김일성-이후락 회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
 1972/5/29 박정희-박성철 부수상 회담
 1972/7/4 7.4 공동성명
 1972/9/12 김일성 일본 마이니찌신문 대담
 1972/9/22 정준택특사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루마니아대통령면담 평화공세의 목표와 단계 설명
 1972/10-1973/6 남북조절위원회 1-3 차회담
 1973/6/23 한국 5.23 선언 북한 5 대방침
 1973/ 8/26 남북대화의 중단 선언

한국: 1970년대초 데탕트의 변화속에서 한국은 3중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 대립과 갈등을 억제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선언”을 하고 1972년에는 북한과 함께 “7.4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어서 1973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포함 하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첫 번

제로 신뢰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다 나가고 군대는 10만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평화 개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야말로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평화는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얘기를 듣고 나옵니다.”

셋째로 평화의 의지 또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 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만3천여 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제안하고 있다. “.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 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 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 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고 성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을 열 번 스무 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V. 탈냉전과 평화

북한: 탈냉전 3 중생존전략

한국: 북방정책/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국내민주화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화 개념을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연형묵 총리가 제3차 회담에서 요약한 북한의 평화강령이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우선적 지위에 놓고 해결하자는 것이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 군대를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1991년 5월 31일 '조선반도

의 평화를 위한 군축' 을 제안했다. 핵심내용은 첫째, 남북신뢰조성을 위해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우발적 충돌과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둘째, 남북 무력감축을 위해서 군축 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 명 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 명 선으로 축소하며,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 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 한다. 병력 축감은 쌍방 사이의 단계별 병력 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 폐기한다.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군축 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외국무력의 철수를 위해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남조선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핵무기를 생산·구입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로의 출입과 통관을 금지한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넷째,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 문제들 합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 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해소 방안으로서 1) 상호체제의 인정과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치적 신뢰구축, 2) 군 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 군사정보의 상호 공개와 교환, 특정 규모 이상의 부대 이동 및 교류, 특정 규모 이상의 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 통보,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3) 남북한 군비감축추진의 3단계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이에 덧붙여 제3차 남북한 총리회담에서 북한이 남북한 군사적 대결 해소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강조하고 있는 남북 불가침선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를 토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합의서> 제6조에 명시된 불가침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력불사용,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 이외에 불가침에 대한 실천 의지의 필요,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의 수정,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확고한 보장 장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해소방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한국정부안은 군비통제의 필수조건으로서 정치적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정부는 핵무기와 외국 무력의 철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또는 조성 방안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나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

전화와 같이 남북한이 함께 제안한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은 쌍방의 군사력과 군사적 의도의 투명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고 북한은 군사훈련과 연습을 제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군비감축의 경우에는 한국은 공격형 전력 구조의 방어형 전력 구조로의 전환과 무기 중심의 불균형 감축을 제안하고 있고 북한은 병력 중심의 균형 감축과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 중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가 현장검증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불가침선언의 경우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첫 단계로서 남북 불가침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기습공격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불가침선언을 모색하고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군축 방안은 부분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문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상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충은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은 북한이 1960년대 이래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기반을 두어, 첫째, 주한미군의 철수를 모색하고, 둘째,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혁명역량을 도와 변혁을 모색하며, 셋째, 유사시에 군사 역량의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하여 왔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팀 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의 군사훈련,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그리고 주한미군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걸림돌을 하루 빨리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VI. 맺는 말